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박추아°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e-mail: lovelychoa@hanmail.net°

Status and Measures for Cyber Sexual Violence

Cho-A Park°

°Dept. of Ph.D Department of Law, Chosun University

요 약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키워드: 사이버 범죄(Cyber crime), 가상공간(Cyber-space), 사이버성폭력(Cyber-sexual violence), 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자율규제(Voluntary restraint)

1. 서론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테블릿 PC 및 휴대용 PC등의 발전과 함께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는 말 처럼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즉,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셈이다. 이러한 인터넷 과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국경성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 중 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 사이버 음란물의 무차별한 유통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익명성이 높 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 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법적지위 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 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사이버상 의 성폭력이라고 해서 덜하거나 상처가 깊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 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세 계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공 간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실

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효과적인 대책방 안을 연구해 보고자한다.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은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문헌에 나타나 있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사이버 성폭력은 크게 두 가지 지배적인 관점에서 분류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유사하게 사이버 성폭력을 "인간의 성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다루는 입장이고, 두 번째 관점은 주로 여성운동단체나 여성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사이버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관점에서 다루는 입장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 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PC통신, E-mail, SNS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성적수치심유발,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 및 불안감조성) 로 규정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사이버 성폭력을 주로 여권운동단체 및 여성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 력"이라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개념화 하는 방식이다. (사)한국성 폭력상담소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을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 외모 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 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건전한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나아가 성적인 접 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 만으로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성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고 후자 는 '성차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서 사이버 성폭력을 "여성이라 는 성에 근거하여 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이며 심리적인 폭력 ·성적 괴롭힘·욕설·비속어 등으로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성적 메시 지까지"도 사이버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 교적 전자에 비해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개념 방식은 협의적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성적 자결권이, 후자는 넓은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여기 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주된 보호이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전자와는 달리 여성의 통신환경을 실 질적으로 저해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후자 와 같은 광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인터넷 및 휴대용 PC의 확산으로 우리 삶의 보편화가 되어버린 사이버 접속과 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제공, 접근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반면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형 사이버범죄를 감안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의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실시한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성폭력이 우리주위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부가 사이버성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이버 감시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인터넷 채팅에 참여하는 네티즌의 22%는 채팅상대 방이 음란한 쪽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오면 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채팅(일반채팅)사이트에서 음란한 제목의 대화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는 물음에 ① 41%가 '호기심이 생긴다'고 답하였고, ②'불쾌하다'는 34%, ③'직접 참여한다'는 9%로 나타났다. 채팅에서 '타인이 음란한 내용의 쪽지나 대화를 걸어올 경우?'는 ①'무시한다'가 5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②'같이 참여한다'도 22%에 달했다. '채팅사이트에서 음란 대화방을 본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①'자주본다' 36% ②'가끔

본적 있다' 28%로 경험비율이 6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 팅 목적'은 '이성친구사귀기'가 44%로 가장 많았다. 또 '사이버성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①42.7%가 '생각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②'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대답도 26%에 달하였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2001년 1~2월까지 네티즌 8,339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사이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 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 사이트에서 여성의 (1)41.6%가 '사이버섹 스 요구' ②37.6%가 '성관련 욕설' ③33.9%가 '성적표현', ④ 21.4%가 '온라인 스토킹' 그리고 ⑤ 20.8%가 '현실 성관계 요구' 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은 ① 31.0%가 '성 관련 욕설' 피해를 입었고 ② 18.1%가 '사이버섹스 요구' 그리고 ③ 15.6%가 '성적표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른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의 76.8% 그리고 남성 의 58.5%가 대화방에서 나와 버리거나 컴퓨터를 꺼버리는 등 소 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소극적 대응을 가장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에게 의논하거나 가 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개인적 대응을 하는 비율은 남성이 22.1%로 여성(13.3%)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내용을 올리거나 신고센터에 신고하 는 등 사회적·법률적 대응은 여성 19.6% 그리고 남성 23%로 비 교적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Ⅲ.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책

1. 현실적 대책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므로 되도록 반응이 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피해를 입은 때는 아닐한 태도로 무시해 버리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제2, 제3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피해신 고센터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의 도 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이버성폭력의 문제의 해결 점은 우선 사이버공간에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만 드는데서 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활동할 수 있다 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pc통신업체에 가입하려면 실명 가입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가입의도나 목적자체가 불법적이라 면 실명을 쓰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생성 프로그램과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짜 주민등록 번 호를 입력하고 얼마든지 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서는 해당업체가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를 확인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 다. 이러한 환경이 사이버 공간을 무례한 사회로 만들고 사이버성 폭력을 방치하게 하므로 보다 정비된 법적 절차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질 수 없는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야만 근본적으로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책으로서는 첫째,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기능강화(2.법적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2. 7)

제와 관련된 쟁점사항에서 세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예방활동 및 대처능력강화, 셋째,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에서의 홍보 및 계몽활동의 강화 넷째,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강화 다섯째, 수사기관에서의 단속과 처벌 활동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바일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새로운형태의 비대면성, 익명의 소통 환경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책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일탈이 합리화되고 정상화 되는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이 오염되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자들의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사용 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전문작·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 특성상 타의적으로통제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자의적으로 인터넷사용자들의 사이버문화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이 어느정도는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법적 규제와 관련된 쟁점시항

2.1 법적규제의 난제

2.1.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

인터넷에서의 불법, 불건전 정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 사이버 상에서의 성폭력 이라는 것은 문자나 영상 형태의 표현으로 가해지는 것인데, 이것 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인터넷상 성폭력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 해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한 것은 아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표현에 자유 보장 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규제 법안과 관련된 논란은 상당하다.

2.1.2 남녀간의 인식차이

사이버 성폭력의 법적 규제가 어려운 점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이를 들 수 있다. 동일한 행위나 제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할 경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희롱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이는 미국의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아리조나대학 바바라 구텍교수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한 성적 유혹을 받을 경우 이를 기분 좋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의67%, 여성의 17%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유혹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 남성 15%, 응답자 여성 63%였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성적 표현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조사에서도 성희롱에 대해서 여성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반하여, 남성의 67.3%가 "악의 없는 성적 농담은 활력소가 된다."고답하였다.

2.2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사용자나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기술적 혹은 사회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형태는 정부에 의한 규제의 권한이 사업자에

게 위임되는 것에서 사업자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규제의 장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율규제의 목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을 하는 측에서의 '표현의 자유'만 아니라 표현을 보는 측에게도 방어적으로 원치 않는 표현을 보지 않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규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선택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원치않는 정보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Ⅳ. 결론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사이버공간에 노출되어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 이상으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 이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우 울증, 분노, 협심증과 같은 심적인 고통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체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심에 시달리는 등 이러한 피해의 심각 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매우 낮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 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 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IT 강국이라는 명성과 걸 맞게 갈수록 인터넷의 발달과 휴대용 PC등의 기기가 발전함으로 써 온라인세상과 오프라인세상의 공존은 더욱더 밀접하게 되고 넓 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사이버상의 성폭력 문제는 정부만의 일방적 과제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 [2]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 [3]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 [4]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 http://www.iwomen.or.kr
- [5] 정완,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9호, pp.5-11, 2002.1~2월호.
- [6]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9~10월호
- [7] 백광훈,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제20 권 제1호, 수사연구사, 2002. 1.
- [8] 이민식, "범죄의 기회와 사이버성폭력 피해", 형사정책연구 제 14권 제1호, 2003.